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재정운영의 방향

재정분권의 추진배경

-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여러 단계의 정부에 배분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수입원을 보유하고 합리적인 정부간 자원배분을 통해 자신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재정적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즉, 그동안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사무)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나타남. 이에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 현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자원 중심의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세출의 자율성과 합리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재정분권 관련 주요 추진내용

-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 8월에 추진방안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2017.11월)하고 이에 따라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재정분권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18년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함. 이와 같은 재정분권 관련 추진전략과 과제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표 1>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주요 추진과제 ▮

구분	재정분권 추진전략 및 과제	비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 이전자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행정안전부(2018.1.)	◆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	2018년 업무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 •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18~'22) (기획재정부, 2018.8.)	◆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가재정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 지역밀착형 기능.사업을 재원과 함께 단계적 지방이양 • 자원배분, 조직.인사 운영 등의 제도 획기적 개선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위원회, 2018.9.)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추진전략 3)	자치분권 추진과제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국고보조사업 개편 •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추진전략 1)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추진전략 5) •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추진전략 5) 	
재정분권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8.10.)	◆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실현	1단계 재정분권('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율 확대(부가가치세수의 11%→21%) • 기능이양(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3.5조원 내외) •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45%) 	
	◆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지방재정제도 혁신	2단계 재정분권('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제도 근본적 개편 • 지방세 추가확충 •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이양 • 지방교육재정 개혁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

- 2018년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단계적 추진을 기본원칙으로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재정분권안에 의하면 1단계 재정분권 기간에 지방세가 8.4조원 이전되어 국세-지방세 비중이 74: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이루어 지는 2022년에는 국세-지방세 비중이 70:30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표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과 ▮

구분	1단계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2019년	2020년	2021~2022년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4%p (3.3조원)	지방소비세율 +6%p (5.1조원)	국세·지방세 전환 등 (12조원+α)
소방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0.3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0.2조원)	-
기능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3.5조원 내외)	-
국세 : 지방세 ('16년 76:24)	75:25	74:26	70:30

주: 재정분권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10), p.6 참조

지방재정운영의 방향

- 첫째, 재정분권의 확대는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강화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지방정부는 자주적인 재정관리 운영능력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재정분권에 있어서는 기능(사무)이양, 세원배분(조정), 재정균형 장치 등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세입재원 확충과 지역 간 재정균형 간의 갈등현상 등 재정분권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적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재정분권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방재정제도 정비(예, 국고 보조금 등)는 아직 미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재정분권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요인과 지역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력적 네트워크(중앙정부, 지자체, 지방협의체, 시민단체 등)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내용문의 : 이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3-769-9875, hyo@krila.re.kr)

지난호 보기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김건위 연구위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